

여 지도부에 지역 출신 약진...‘호남 정치 복원’ 기대감

박선원·서미화, 6년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자력 진출
김원이 전략기획·강위원 정무조정...양부남·조계원도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신 정치인들이 선출된 데 이어 주요 당직에 임명되면서 호남정치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17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나주 출신 박선원 의원과 무안 출신 서미화 의원이 나란히 선출됐다.

이어 김민석 대표는 당 대변인에 조계원 의원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 신정훈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에 김원이 의원을, 정부조정실장에는 강위원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역대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신들이 이처럼 대거 진출하기는 수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선출직에 당선된 박선원·서미화 의원은 비록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역 연고가 강한 인사들이어서 호남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특별시 출신이 지명이 아닌 당원 선택으로 최고위원에 오른 것은 2020년 양향자 전 의원 이후 6년만이다.

박 의원은 최종 17.57%, 서 의원은 16.60%를 얻어 각각 2, 3위로 지도부에 입성했으며 당 대표와 함께 전명계 인사들이어서 무게감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면서도 중앙당 지도부에선 줄곧 소외됐던 호남 정치권으로서 의미있는 진출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당직에서도 약진이 두드러진다.

당 대변인에는 여수시장이 지역구인 조계원 의원이, 목포가 지역구인 재선 김원이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박선원



서미화



김원이



양부남



조계원



강위원

당 대변인은 당 대표와 함께 각종 주요 회의에 참석해 당의 입장을 언론에게 전하는 창구이고,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정부 전략을 총괄하며 당이 치르는 공직선거 기본계획과 전략 등을 세우고 여론조사, 중장기 발전전략까지 수립한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유능한 집권 여당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의 정치적 판단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정부조정실장에는 강위원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발탁됐다.

원의 인사의 정부조정실장 기용은 4년 만으로, 당·정부·국회는 물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까지 잇는 가교 역할이 기대된다. 40년 만의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국비 확보, 첨단산업 유치 등에서 쌓은 조정 경험에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정책위 수석부장으로는 경제부문에 해남출신 민병덕 의원이 임명됐다. 이번 전대에서 김 대표와 연합 전선을 펼친 송영길 의원을 도운 민 의원은 김민석 대표 체제의 정책브레인 역할을 맡았다.

법조인 출신 양부남(광주특별시 서구

을) 의원은 당의 법률 현안과 법적 대응을 총괄하는 법률위원장에, 보성 태생의 김기표 의원은 당내 비위와 윤리문제를 들여다보는 윤리감찰단장에 각각 임선했다. 검사 출신 두 의원이 당의 윤리·법률 투톱을 맡은 셈이다.

장흥 태생의 문진석 의원은 요직인 사무부총장에 발탁됐다.

김 대표가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호남이 결정적 지원을 한 데 대한 보답 성격의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광주특별시 출신 의원들이 자력으로 최고위원에 진출하고,

주요 당직을 맡게 된 것은 지역민들의 큰 성원이 디딤돌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앙당의 의사 결정은 물론 국정 현안에 광주특별시의 발언권을 높이고 메가 프로젝트의 한 축인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중앙 정치에서의 위상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새 지도부 인선 결과는 지역 현안을 국가 의제로 발전시키고, 내우외환의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앞장서 헤쳐온 호남 정치가 되살아나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부득이한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사각 없애야”

김민석 대표, 첫 고위당정
“당정청 관계 더 심화·강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정부 의 세계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초와 세계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열렸다.

김 대표는 “중부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중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계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장



한세숙 국무총리 (앞줄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강호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속도감 있는 부

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완화 등 집권당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민주당·정부·청와대) 관계에 대해선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

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직전 국무총리 자격으로 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현’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임명

소방청장에 최용철 차장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이런 인선 결과를 전하며 “박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통상 및 무역 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WTO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의장, 대미 관세협상TF 실무수석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협상전략을 통해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상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역을 극대화할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장에 최용철 소방청



박정성



최용철

차장을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최 청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와 소방청 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27년 동안 일선 구조현장과 핵심 정책 부서를 모두 거친 소방 전문가”라고 밝혔다.

이어 “탁월한 현장지휘능력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했으며, 소통과 화합의 합리적 리더십으로 소방청 내 신망도 높다”며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국정목표에 따라 철저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5·18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소멸시효 폐지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5·18보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18보상법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정신적 손해까지 피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 ‘5·18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5·18 관련자들은 위원결정을 근거로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나,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소멸시효의 법리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조차 주저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어느 피해자 하나 소홀함 없이 국가가 과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과거를 반성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2년 전 발의한 법률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와의 의견을 조율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5·18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들을 생각하며 법률안 통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여, 이진숙 의원 징계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우파 단체와 포럼을 열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도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과에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함께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내면서 이 의원의 행태에 대해 “헌법정신과 5·18 정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지난주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은 구속력 있는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이 의원이 국회 안에서 벌인 행태는 헌법 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자격정지’ 법안도 추진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 대표가 선언하고 약속한 만큼 원내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5·18을 폄하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이유로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변명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0일 조 정치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강릉에서 열린 최고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 (오른쪽)과 원내대변인인 이주희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과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의원을 제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진숙 처리를 시작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결의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발”
서미화 “정치·윤리적 책임 미뤄선 안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